대북제재, '완전 비핵화'까지 유지… 金 '서울답방'은 유효

6차 한미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 '진전'
기존 제재들 강력 이행 유지해야
북미·남북회담 관련사항 코멘트
2차 북미정상회담 희망도 언급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현재의 대북제재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유지해야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카드도 여전히 유효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 공감대를 표시하고 한·미 정상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해 내년 초 예정된 북미정상회담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채 한 달 남지 않은 올해는 아니더라도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성사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현지에서 30분간 양자회담을 갖고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굳건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이를 놓고 "비핵화가 경제적 번영과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북한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제재들의 강력한 이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노력에 추가적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 두 정상은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추진하는 문 대통령의 의견에 트럼프 대통령도 공감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이튿날인 1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는 평화 안에서만 가능한 가운데 G20 정상들 모두 한반도 평화를 변함없이 지지했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의 성공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이 끊임없이 연내 답방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왔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라며 "다만 연내 답방이 아직 열려 있고 유동적이지만, 우리 생각만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사항을 각각 언급하고 그에 대해 서로 코멘트하면서 공감대를 확실하게 가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차기 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을 위한 또 다른 역사적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이른 시일 내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거대한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면서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11월 열릴 예정이었다가 미뤄진 북미고위급회담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미 간에도 굉장히 소통은 정중하게 잘 되고 있다. 종전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급적 빨리 열려야겠다는 데 두 정상 생각이 일치했다. 큰 계기가 될 것 같다. 지난번(1차 북미정상회담)보다 더 진도가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美·中 90일간 관세전쟁 휴전
합의도출 못하면 '25%' 부과

내년 초부터 세계 경제 1,2위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일(현지시간) 무역 담판을 통해 추가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휴전'하기로 했다.

세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업무 만찬을 마친 뒤 낸 성명에서 미국은 향후 90일 동안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2천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려던 계획은 일단 보류됐다.

대신 양측은 이 기간에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을 바로잡기로 했다. 만약 협상이 실패한다면 보류한 '25%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미·중이 무역전쟁의 확전이냐, 휴전이냐의 갈림길에서 '휴전'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전쟁 장기화로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샌더스 대변인은 "미·중은 앞으로 90일 동안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 사이버 침입·절도 등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양측은 이 기간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만약 이 기간 내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10%의 관세는 25%로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아직 합의되진 않았지만, 중국이 무역 불균형 축소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농업, 에너지, 산업 및 기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할 것"이라며 특히 미국산 농산물은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미중 양국 정상이 추가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이 국무위원은 이날 미중 정상회담을 가진 뒤 브리핑에서 "두 지도자는 새로운 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상호 방문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왕 국무위원은 미중 양국이 자국 시장을 상대방에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면서 양국 정상들의 이번 회담에 대해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합의 덕분에 양국 간의 경제적 갈등이 더 악화하는 일을 막게 됐다. 또한 '윈윈' 협력을 위한 새로운 공간도 열렸다"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을 하면서 우호적이고 솔직한 분위기에서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 2시간 30분 동안 깊이 있게 교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왕이 국무위원은 이어 양측이 중요한 공통된 인식에 도달했다면서 이번 회담이 향후 한동안 중미 관계를 위해 방향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두 정상이 양국 관계를 꼭 성공시켜야 하며, 꼭 성공될 것이라면서 조율과 협력, 안정을 기조로 하는 관계를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두 정상은 이날 현지 시각으로 오후 5시 47분부터 2시간 30분 동안 무역 담판을 했다. 이는 애초 예정된 시간보다는 30분 정도 늘어난 것이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아르헨티나 대통령 관저에서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 G20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담에서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 G20 양자회담장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文 대통령, 아르헨·남아공·네덜란드와 '정상회담'
양국 협력·한반도 평화·北 비핵화 '한 뜻'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방안과 한반도 문제 공조 등을 놓고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아르헨티나와는 양국 간 경제·통상 등 실질협력 강화를, 핵 개발 프로그램 폐기 경험을 갖고 있는 남아공과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지속적인 지지를, 네덜란드와는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각각 약속했다.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양국 간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 관계'를 체결했을 당시 열린 데 이어 14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는 동시에 그간 아르헨티나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한 데 사의를 표했다.

이에 마크리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절대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아공 정상간 회담은 6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그간 남아공 측이 보여 준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19~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이자 과거 핵 개발 프로그램 폐기 경험을 가진 남아공 측의 역할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남아공은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한 경험이 있는 만큼 비핵화 과정에 있는 북한에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북한을 설득하고 비핵화로 이끄는 데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남아공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

한·네덜란드 정상은 지난 2월 평창올림픽에서 머리를 맞댄 후 올해 두 번째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어 네덜란드가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및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이라는 중책을 맡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뤼터 총리는 "긍정적 상황 변화를 이끈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지속해서 지지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특히 양국 교역량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네덜란드의 대한 투자액도 유럽 국가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양국 간 교역·투자가 증진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승호 기자